광주 민주·문화, 전남 자연·역사… 통합 관광벨트 조성

'5극 3특'
광주·전남 발전 지금이 기회다

〈4〉 남도, 문화·관광으로 도약

문화·관광분야 연대와 협력
축제 연계하고 상품 함께 개발
생활·문화 공동 행정체제 구축
관광 정책 시너지 효과 높이기

이재명 정부의 '5극3특'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골자는 문화로 시민 행복을 높이고 관광으로 지역 성장동력을 창출하겠다는 구상이다.

'5극3특'은 전국을 5대 광역권과 3대 특별지역으로 균형 성장시키려는 구상으로, 호남권은 광주·전남을 중심으로 한 남서부 거점으로 육성될 예정이다. 문화와 관광은 균형발전과 지역 활력 증진의 핵심 수단으로, 중앙의 문화시설과 관광객이 지역으로 확산되는 문화분권이 이뤄져야 인구와 산업도 따라온다는 게 중론이다.

광주는 균형발전정책과 연동해 5·18민주화운동의 민주·인권 정신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등 현대적 인프라를 토대로 문화·관광 르네상스를 일구겠다는 복안을 마련했다. 전남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품은 전남 관광명소들을 묶어 체류형 관광벨트를 구축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는 국립5·18민주묘지, 옛 광주교도소, 적십자병원 등 민주·인권 사적지 등을 역사적 가치를 담은 문화관광 콘텐츠로 조성하고 있다.

최근에는 옛 광주교도소와 적십자병원 등 5·18 사적지를 민주인권기념파크와 역사체험 교육공간으로 조성하는 국가 사업이 추진 중이다.

광주시는 옛 교도소 부지에 5·18 역사전시관과 국제인권 교류시설을 갖춘 복합공원을 만들고 옛 적십자병원도 보존해 미래세대 교육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광주는 2015년 개관한 ACC에 더해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분관, 국회도서관 분관 등 3대 국립문화시설 유치에 나서고 있다. 이들 기관은 명실상부한 광주 문화수도 인프라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정부도 2024년 예산안에 이전 타당성 조사비를 반영하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옛 신양파크호텔 부지에는 국립현대미술관 분관이 2027년 개관 목표로 추진 중이다. 세계적 현대미술 전시와 미디어아트·AI융합 콘텐츠, 호남권 수장고 기능을 아우르는 복합미술관으로 구상된다. 민주·인권의 상징인 광주에 현대사 중심 국립박물관과 국회도서관 분관이 들어서면 문화중심도시 위상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전남은 그 자체로 거대한 자연관광 박물관이다.

여수 밤바다는 케이블카와 돌산대교 불빛이 어우러진 야경 명소로, 순천만 습지와 국가정원은 세계적 생태관광지다. 해남 땅끝마을은 한반도의 시작과 끝을 느낄 수 있는 역사관광지이고, 보성 녹차밭은 사계절 힐링여행지다.

진도 울돌목은 명량대첩 승전지로 물살 체험과 함께 역사교육의 장이 되고, 완도 청산도는 슬로우시티 섬으로 유명하다. 강진 다산초당 역시 역사와 자연이 어우러진 명소다.

전남도는 이런 자원을 묶어 체류형 광역관광벨트를 조성 중이다.

여수는 해양레저와 야경을 활용한 '리듬 오브 더 나이트', 광주 동구는 예술여행과 미식투어를 결합한 '동네라이프' 등 생활관광을 확대하고 있다.

광역 순환버스 '남도한바퀴'는 올해 11월 말 기준 이용객이 2만5000명으로 전년 대비 49% 늘었다. 전남도는 겨울에도 22개 시·군을 아우르는 28개 코스를 선보이며 사계절 상품화에 나서고 있다.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는 총 사업비 1조5000억 원 규모로 추진되며, 글로벌 해양관광 거점으로 육성된다. 또 서남해안권, 동부권 등 권역별로 총 1조 3000억 원 규모의 광역관광개발 사업을 2027년까지 추진한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정부의 '5극3특' 정책을 성장동력으로 삼기 위해 국내 최초로 광주·전남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꾸리고 있다.

행정구역은 갈라졌어도 생활·문화공동체로 맺어진 두 지역이 공동 행정체제를 구축해 산업, 교통, 관광 등 초광역 사무를 함께 추진하자는 취지다.

특별지자체가 출범하면 문화관광 분야에서도 연대와 협력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예를 들어 광주~전남 간 관광벨트 조성, 축제 연계, 공동 관광상품 개발, 문화예술인 교류 등이 통합된 계획 아래 이루어질 수 있다. 특별지자체 공동사무에 관광이 포함된 만큼, 광주·전남이 힘을 모아 시너지 관광 정책을 펴나갈 기반이 마련되는 셈이다.

'5극3특'은 전국을 5대 광역권과 3대 특별지역으로 균형 성장시키려는 구상으로, 호남권은 광주·전남을 중심으로 한 남서부 거점으로 육성될 예정이다

문화와 관광은 균형발전과 지역 활력 증진의 핵심 수단으로, 중앙의 문화시설과 관광객이 지역으로 확산되는 문화분권이 이뤄져야 인구와 산업도 따라온다는 게 중론이다.

광주·전남이 예향의 전통과 민주혼을 바탕으로 문화관광에 과감히 투자하고 협력에 나선 것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면서 대한민국 성장축을 다변화하는 선도 모델이 되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전남 특별지자체는 새로운 성장기회를 여는 역사적 출발점"이라며 "전남이 커져야 광주가 커질 수 있고, 초광역협력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 또한 "광주와 전남은 하나의 뿌리에서 시작된 불가분의 관계로, 특별지자체를 통해 하나의 공동체로 재도약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지역의사양성법·필수의료법 처리"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대 협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민주당과 정부·대통령실은 4일 안정적인 의료 개혁과 필수 의료 분야의 공백을 막기 위해 '필수의료특별법'과 '지역의사양성법'을 9월 정기국회 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연합뉴스

교육부, 전남 국립의대 2030년 개교 제시
지역사회 '술렁'…전남도, 신속 설립 촉구

"이 대통령 1호 공약 미루지 말라"

교육부가 전남 국립의대 개교시기를 오는 2030년으로 제시〈광주일보 9월4일 3면〉한 것과 관련, 전남도가 신속한 설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전남도 안팎에서는 구체적 로드맵 없이 현 정부의 임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을 국립의대 개교 시기로 막연하게 제시했다는 점에서 최근에야 봉합된 의·정 갈등을 감안, 사실상 대통령 공약 실천에 대한 소극적 입장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의대가 없는 유일한 광역지자체인 전남에 국립 의대를 설립해 공공·필수·지역의료 인력을 직접 양성하겠습니다'고 약속한 '전남 1호 공약'으로, 최근 국정기획위원회가 '의대없는 지역에 의과대학 신설을 추진하겠다'며 국정과제를 발표해놓고도 정작 교육부는 국립 의대 개교 시기를 임기 말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지역사회 내 술렁이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4일 송하철 목포대 총장, 이병운 순천대 총장, 김원이·김문수 의원과 공동명의로 전남 통합대 국립의대의 신속한 설립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김 지사 등은 공동입장문을 통해 "전남도는 심각한 의료 취약지로, 단 하루라도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2027년 전남 통합대 국립의대 설립을 정부에 줄기차게 건의해왔다"면서 "교육부가 2030년 개교를 제시한 데 대해 아쉬움이 크다. 200만 전남도민 역시 교육부 의견에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기국회 대비 워크숍'에서 전남 국립의대 개교 시기를 2030년 3월로 전망했다. 확정된 시기가 아닌 통상 신설 의대 설립에 필요한 절차를 거칠 경우를 가정한 예측 모델이라는 게 교육부 입장이지만 대통령 1호 공약인 만큼 다른 공약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이라는 지역민 설립 열망을 저버린 소극적 방침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 지사는 "전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대와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심각한 의료 취약지로,통합대 국립의대 설립은 도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이 걸린 국가적 과제"라며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만큼 교육부가 이를 감안해 전남도, 양 대학과의 협의를 통해 설립 시기를 앞당긴 로드맵을 발표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전남도는 의대 설립이 하루빨리 이뤄지도록 대학, 정부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며, 의대 정원 배정과 예비평가 인증 등 설립 절차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허정 전남 국립의대 유치 위원장은 "전남 국립의대 설립 문제는 의료계 눈치보기나 하면서 늦춰져야하는 사안이 아니다"며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하루라도 빠른 개교를 위해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